

막강해진 통합집행부 견제... '의회·주민참여 확대' 시급

입법조사처, 전남광주통합특별법 보고서

시·군·구간 사무, 재정권 차이 개선 필요 지방세 확충 통한 자체재원 확보도 절실

광역행정통합으로 막강해진 집행부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지방의회와 주민참여의 확대가 시급하다.

또 통합특별시 출범 후 지속가능한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세 확충을 통한 자체재원 확보가 절실하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최근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보고서

를 통해 이런 지적을 내놓았다.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광역 간 행정통합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관련해서 제안한 향후 과제는 다섯 가지다.

통합특별시의 자치구와 시·군 간의 자치역량을 균등하게 보장하는 제도 설계를

비롯해 △집행부 견제를 위한 지방의회 및 주민참여 역할 확대 △지방재정 구조 개편과 지속가능한 재원 마련 △광역 간 통합 절차와 특례 부여에 대한 법적 기준 마련 △주민의사 수렴 등 속의민주주의를 위한 절차 보완이다.

입법조사처는 "특별법 통과로 막강한 권한을 지닌 단체장이 생기는데, 이를 감시하고 견제할 기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통합특별시의 집행부를 효과적으로 감시·견제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역할을 강화하고, 주민참여 제도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지방의회의 지위와 다양성을 강화할 것을 당부하며 "광역의회의원 정수를 늘리고, 비례대표의원 비율을 높이는 한편, 기초의회의 경우 중대선거구 확대 등 선거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 주민참여제도인 주민조례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제도에서 주민의 참여권한을 늘리기 위한 개편도 요구했다.

지방재정 구조 개편과 지속가능한 재원 마련을 위해 통합 이후 현행 지방세, 보통교부세, 조정교부금 구조 등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할 것도 당부했다.

현행 지방세 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통합특별시의 지방세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비롯해 △통합특별시 소관 시·군·자치구에 대한 보통교부세 교부 방식의 명확한 설정 △통합특별시의 조정교부금 체계의 확립 : 균형발전기금을 신설할 경우 조정교부금과의 역할 정립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4년간 20조 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지만 재

원을 마련하는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고, 현재 통과한 특별법에도 포함되지 않았다"며 "통합특별시 출범 후 지속가능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지방세 신세원 발굴, 조례를 통한 지방세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입법조사처는 "시·군과 자치구 간에는 사무와 재정권한에 명백한 차이가 있다"며 "이를 제도 개선을 통해 극복하는 후속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시·군과 다르게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않고 직접 특별시·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가 14개 분야 42개 업무에 이른다.

또 11개 지방세 세목 중 광역시는 9개를, 소관 자치구는 2개를 징수한다. 반면 광역도는 6개를, 소관 시·군은 5개를 징수

한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통합특별법 심사 과정에서 통합특별시 내 자치구의 행정·재정적 자치권을 확대·조정하는 방안과 통합 이후 자치구의 보통교부세 산정 및 직접 교부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한 바 있다.

입법조사처는 또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과정에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특별시 논의에서 가장 문제로 지적된 사항이 주민의사를 수렴하고 반영하는 속의민주주의 절차가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제라도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

강기정 시장, 화순·장흥서 통합 상생토크

화순,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등 조성
장흥, 문화관광기행특구 활성화 모색

강기정 광주시장이 전남 화순과 장흥에서 잇따라 '광주전남 통합 상생토크'를 갖고, 지역 발전 방안으로 공유했다.

강기정 시장은 5일 오후 화순군청 대회의실에서 '광주·전남 통합 화순군 상생토크'를 개최하고, 통합 이후 화순군의 발전 방안을 군민들과 공유했다.

이 자리에는 구북구 화순군수를 비롯해 화순군민 등 300여명이 참석해 통합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강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통합특별법의 핵심 내용과 정부 재정 지원이 가져올 변화를 설명했다. 이어 특별법안 내용과 관련한 화순군 지역발전과 연계할 청사진을 제시했다.

화순군 도약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첨단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구축, 30분 광역생활권 구축을 위한 광역환승체계 구축, 광주다음 통합돌봄 확산, 체류형 관광벨트 구축 등을 제시했다.

또한 화순·보성·장흥·강진을 '중남부 특화권'으로 묶어 바이오, 푸드테크, 해양·산림맞춤 치유 산업 등을 특화하는 비전도 밝혔다.

강 시장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 '공공의료 인프라 등 확충에 관한 특례' 등 특별법 내용을 언급



강기정 광주시장이 5일 화순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전남 통합 화순군 상생토크'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하며 통합 이후 화순이 의료 거점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공지능·첨단제조·광주과학기술원 등 광주의 인공 지능(AI) 인프라와 화순 백산산업특구를 연계해 첨단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강 시장은 앞서 이날 오전 장흥군민회관에서 김성 장흥군수, 도·군의원, 장흥군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상생토크에선 장흥과 관련한 특별법 특

례 조항을 소개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강 시장이 제시한 주요 구상에는 '햇빛연금'과 '바람연금' 등 신재생에너지 기반 확대를 비롯해 문화관광기행특구 활성화, 그린바이오 산업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광주·화순·장흥을 잇는 바이오 의료벨트 조성, 인공지능(AI)·반도체 인재 양성 프로그램 확대, 통합 광역생활권 구축 등이 포함됐다.

강 시장은 이창준·한승원 작가와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 등과 인연이 깊은 장흥의 문화적 자산을 강조하며 문학·관광·교육을 결합한 문화관광기행특구 활성화 계획을 밝혔다.

또 "광주의 복합쇼핑몰 등 도시 기반 시설과 장흥의 물축제, 통합의학박람회 등을 연계해 장흥도 살고 광주도 성장하는 상생 전략을 함께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

광주시, 해빙기 포트홀 등 24시간 응급 보수

8개 긴급보수반 투입

광주시 종합건설본부는 다음달 10일까지 겨울철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발생하는 도로파임(포트홀)과 비탈면 유실에 대비해 시민 안전을 위한 도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도로파임(포트홀) 안전사고 대비 응급 보수는 8개 긴급보수반을 투입, 오는 31일까지 주·야간 및 휴일 관계없이 24시간 신고 접수 즉시 보수를 원칙으로 현장을 살피고 있다.

지난 1~2월 광주지역 도로파임(포

홀) 발생 건수는 2669건으로, 전년 동기 6638건 대비 약 60% 감소했다.

이는 광주시가 지난해 빙고음대로와 무진대로, 하남진곡산단로 등 주요 간선도로 6개 노선(16만8000㎡)에 54억원을 투입해 미리 정비해 마친 결과로 분석된다.

광주시는 도로 정비와 함께 도로파임(포트홀)으로 인해 차량 파손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한 영조물배상보험 점수도 지원한다.

대상은 시 관리 도로인 양북 4차로 이상 도로이며, 사고 발생 시 관련 절차를 안내받아 피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시, 노후경유차 3200대 조기폐차 지원

광주시는 배출가스 5등급 노후 차량을 대상으로 한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올해 종료된다.

이에 따라 해당 차량 소유자는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저공해조치에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가 필요하다.

광주시는 미세먼지와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오는 9일부터 사업비 67억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3200대의 조기 폐차를 지

원한다.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운행 경유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지게차·굴삭기)다.

배출가스 등급은 콜센터(1833-7435)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할 수 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광고문의 062)370-7070
구독문의 062)370-7080

뉴스는 진실이어야 합니다!

거짓 없는 보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
광남일보를 구독해 주세요

